‘진흥원 주권’ 놓고 조계종과 진통

진흥원특위 · 진흥원 갈등 심화… 자승 스님 예방하며 대화 물꼬

1월 22일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가운데)과 김규칠 상임이사(오른쪽)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1975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한 통의 서한을 받았다.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가 보낸 서한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해 거액을 헌납한다는 간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장 거사의 장한 뜻에 박 대통령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불교 진흥에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그렇게 설립됐다.

1975년 8월 16일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진흥원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불교방송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군포교, 불교 학술지원 등 불교계 곳곳에 진흥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큰일을 해 온 곳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진흥원을 사이에 두고 동경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비판부터, 이사회 등 운영방식까지. 조계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계종과 진흥원의 불편한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2008년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를 결성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는 “조계종 스님의 진흥원 이사회 재진출을 통해 진흥원 출범 당시의 종단과 진흥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무차회(의연 · 현조 스님) 무량회(진화 스님) 화엄회(각원 스님) 보림회(선문 스님) 등 종책모임 별로 위원을 선임해 진흥원특위를 꾸렸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주요 종책모임 별로 골고루 안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계종이 진흥원을 접수하기 위해 종책모임간 이해가 일치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종회에서 특위까지 꾸려진 상황에는 당시 불교방송 사장추천을 둘러싸고 진흥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방송 핵심인사의 입김이 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진흥원특위는 “진흥원은 조계종을 보조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단체”라며 “10 · 27법난 전까지 스님 이사가 있었던 만큼 이사회에서의 조계종 지분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흥원 설립 당시 이사회가 정부 · 국회대표 3인과 조계종 대표 2인으로 구성됐던 만큼, 정황상 조계종에 ‘국가에 의해 임명된 당연직 이사기관’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계종 측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1975년 8월 15일 문화공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발송된 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허가서이다. 설립허가서에 첨부된 ‘재단운영 사업계획’에 조계종 총무원 운영보조가 첫 번째 사업이었다는 것.

진흥원특위의 한 스님은 “진흥원이 정부출연기관이면서도 정부나 조계종의 견제 ·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신직이나 다름없는 이사의 선임마저 자의적으로 이뤄져 사유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진흥원특위는 지난해 말 진흥원에 신군부 지원 사유 등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데 이어, 토론회를 통해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를 밝혀보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구랍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토론회 불참과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를 결의했다.

종단과 재단, 출 · 재가의 대립양상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던 양측의 대립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 것은 1월 22일이다.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이례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는 진흥원 특위 의연 스님과 김규칠 진흥원 상임이사도 배석해 대화의 대부분을 조계종과 진흥원의 관계, 특히 토론회에 관해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 직후 자승 스님은 “진흥원 측에서 예정된 토론회가 일방적이고 일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진흥원특위와 진흥원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토론회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종회 특위와 진흥원이 잘 합의해 처리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갈등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연 스님은 “진흥원특위와 진흥원 간에 대화가 부족했다”면서 “진흥원특위 스님들과 상의 후 필요하다면 토론회 연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토론회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 적극 지원”

군종교구 신년하례서 자승 스님 천명

1월 8일 군종교구 · 군불총 임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8일 군종교구 · 국군불교총신도회의 신년하례에서 군포교 증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군포교 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을 설명하며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10 · 27법난기념관과 교육관을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군포교 현안인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에도 종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승 스님은 “포교원과 협의해 사병 수계가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군국불교총신도회 박정이 회장(육군 중장)은 이날 예방에서 △현역 중심 조직개선 △영관급 신도회 연계 △창립10주년 기념법회 등 주요 사업 전개 △주한외국군인 법회 동참 등 신년계획을 밝히며 “자비와 보시, 실천행을 지침으로 군종교구와 협력해 군불교 발전과 호국불교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이에 대해 “새로 군불총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이 회장을 비롯한 신임 군불총 임원진이 훈련소 불사 등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군종교구는 이날 예방에 앞서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불사 등 2010년 중점사업 방침을 밝혔다.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육훈법당은 5000명 규모로 교육관 등이 갖춰진다. 1월 초 논산훈련소 부지를 답사한 군종교구는 최근 건립된 천주교 · 원불교 시설 등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핵심 사업인 육군훈련소 건립불사를 필두로 실질적인 포교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성원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공개변론

21일 대법원서 강의석씨·대광학원 엇갈린 주장

5년여를 끌어온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의 공개변론이 1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의 합숙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기독교를 신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이 아침기도회, 식사 전 기도회, 취침 전 기도회, 촛불의식이나 성경읽기, 찬송 등을 행하게 한 것이다.

또 대광고의 생활수칙 중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한다’ 는 구절을 학생들에게 암기하게 하고, 휴일인 성탄절에 특정 교회로 출석하게 한 후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일 등이 있었다.

이에 강씨는 “주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됐음에도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제배정 방식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학은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대체수업, 자율적 수업참가 등 사학의 종교교육 자유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영란 대법관은 대광학원 측에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자율적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면 위헌성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대광학원 측은 “현재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학교에서는 특정종교를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과목을 편성할 때에는 복수로 편성하고 학생에게 종교과목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학생의 인권과 건강한 인성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주 기자

4대강 사업 철회 국민서명운동

4대강운동본부 21일 출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 · 사회단체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4대강 사업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국민서명운동본부’는 1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고문은 명진 스님(조계종 봉은사 주지),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 정상덕 교무(원불교), 최덕기 주교(천주교 수원교구 전 교구장), 최완택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등 종교계 원로들이 맡았으며, 대표 본부장은 도법 스님(조계종 실상사 주지)이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정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수질오염과 농경지 침수, 자연경관 파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소송과 함께 전국민적 서명운동으로 이 사업을 무효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철회 서명은 3월 말까지 300만명을 1차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명에는 천주교 · 불교 · 개신교 · 원불교 · 대한성공회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해 신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박선주 기자**

죽비와 목탁

교정에도 부처님 가피 필요해

개신교계 첫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아가페 교도소)의 올 6월 완공을 두고 불교계의 우려가 크다.

불교계는 수형자들이 입소를 위해 특정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색채를 띤 교정프로그램으로 선교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개신교계의 완공을 앞두고 불교계는 무엇을 했을까? 2005년 개신교계의 추진 당시 불교계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참여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수백 억에 달하는 예산 조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개신교의 경우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세미나를 열고 모금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나 정치권에 지속적인 압력을 넣는 등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개신교계에서는 기존 민영보호감호시설 운영 등으로 구축된 내적 역량이 큰 힘을 발휘했다.

현재 교정활동 전반에는 불교계의 열세가 두드러진다. 청소년 위탁감호시설만 보더라도 10여 개에 달하는 기독교계 시설에 비해 불교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선 민간위원과 불자교정인들의 활동도 분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교도소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해 제2의 민영교도소, 제1의 민영소년원이 추진된다면 불교계는 또 다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아이에게 어른처럼 무작정 뛰라 할 수 없다. 지방 산사와 폐교 등을 연계해 불교계 보호감호시설부터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출소 후 자활을 돕기 위해 올 1월 법무부가 각 지역에 설립한 ‘중간처우의 집’ 등에 인근 사찰들이 참여해 상담과 창업을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개신교계 민영교소도 운영을 넘어 불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교교정상담 등 교화의 가장 낮은 자리부터 역량을 쌓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묵은 빚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법륜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륜대 복장에 모실 금강경수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